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7

2025. 4. 15.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4. 4. / 박경원 의원 등 13명
- 나. 회부일자: 2025. 4. 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4. 1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건축비용 상승과 건설 경기 악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음.
- 이에 주민 주거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고려하여 용도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 유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7조제1항제5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개정에 따른 준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안 제47조제1항제13호 및 안 제47조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업지역안에서 용적률 완화 (안 제47조제4항)
-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시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 변경 (안 별표 9)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일부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 외의 연면적 의무비율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에 공포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 300퍼센트 이하로 완화 개정된 사항에 맞추어 준공업지역의 아파트와 준주거지역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율을 300퍼센트 이하로 조정하여, 보다 유연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아울러,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규제 조정을 통하여 복합 건축물에 주거용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비율을 조정하여,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상가 공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축 개발행위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8

2025. 4. 15.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4. 4. / 김지훈(국)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2025. 4.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4. 1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해체 허가 대상이 되는 도로폭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이 좁아 형평성에 어긋나고, 해체 허가의 규제로 구조 심의 절차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현행 도로폭을 상향 조정하여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폭10미터 이상을 폭20미터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 (안 제9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용관)

-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도로폭 기준을 10m 이상에서 20m 이상으로 확대하여 해체 허가 대상을 축소 시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현행 해체 허가 대상 규정은 아래 표와 같이 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해체 허가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완화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조례 개정 시 2024년 기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되는 건수는 49건 중 14건으로 약 28.5%가 전환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79

2025. 4. 15.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4. 4. / 김상수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25. 4.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4. 1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제2조~제8조)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제10조)
-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1조)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사항을 규정(제12조)
-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범위를 규정함(제13조)

-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사항을 규정함(제14조)
-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지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3. 12. 26.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기능과 구성 및 운영을 정하였으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리모델링사업의 증가 세대수의 범위,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는 상위법령에 부합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노후계획도시 대상은 없으나, 향후 호평·평내지구(2029년 예정)를 시작으로 진접, 별내 등 순차적으로 정비 수요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680

2025. 4. 15.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4. 4. / 이진환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25. 4.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4. 1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속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 제한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도로부속물 신고 및 처리를 규정함. (안 제6조)
- 포상금 지급방법 및 비밀보장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 포상금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를 규정함. (안 제9조~제10조)
- 대상의 비치의무를 규정함.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도로부속물의 손괴자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도로의 부속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전임
-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과 포상금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손괴신고 및 처리와 포상금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시설물의 훼손에 따른 신속한 신고를 유도 함으로써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손괴자 파악에 따른 도로부속물 복구비용 원인자 부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81

2025. 4. 15.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4. 4. / 김영실 의원 등 15명

나. 회부일자: 2025. 4.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4. 1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복적 규제를 완화하며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의2)
-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2조의3)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용관)

- 본 조례안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하고 현행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를 시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가로판매대 운영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자활을 돕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30년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690

2025. 4. 15.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4. 4.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5. 4.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4. 1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우리시 발전방향 및 도시의 미래상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한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458,502,000	-	458,502,000	100.0
도 시	합 계	242,423,021	증)359,912	242,782,933	53.0
	소 계	46,455,014	증)74,155	46,529,169	10.1
	주거				
	제1종전용주거지역	508,129	-	508,129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109,280	-	109,280	0.0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지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0,716,328	증)33,832	20,750,160	4.5
		제2종일반주거지역	8,649,370	증)40,361	8,689,731	1.9
		제3종일반주거지역	12,108,953	감)191	12,108,762	2.6
		준주거지역	4,362,954	증)153	4,363,107	1.0
	상업지역		2,595,059	-	2,595,059	0.6
	공업	소 계	984,766	감)34,519	950,247	0.2
		일반공업지역	636,415	-	636,415	0.1
		준공업지역	348,351	감)34,519	313,832	0.1
	녹지	소 계	192,388,182	증)320,276	192,708,458	42.0
		보전녹지지역	2,450,506	감)169,717	2,280,789	0.5
		생산녹지지역	166,508	-	166,508	0.0
		자연녹지지역	189,771,168	증)489,993	190,261,161	41.5
비 도 시 지 역	합 계		216,078,979	감)359,912	215,719,067	47.0
	관리 지역	소 계	77,916,975	증)408,776	78,325,751	17.1
		보전관리지역	27,894,992	감)1,026,514	26,868,478	5.9
		생산관리지역	11,648,411	감)843,717	10,804,694	2.4
		계획관리지역	38,367,749	증)2,284,830	40,652,579	8.9
		미세분관리지역	5,823	감)5,823	-	0.0
	농림지역		123,658,135	감)669,781	122,988,354	26.8
	자연환경보전지역		14,503,869	감)98,907	14,404,962	3.1

○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구 분			개소				비고
			기정	신규	폐지	변경후	
용 도 지 구	합 계		62	-	7	55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3	-	1	2	
	개발진흥지구	주거형	9	-	3	6	
	방화지구		2	-	-	2	변경 1
	집단취락지구		48	-	3	45	

○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구 분		개소		
		변경	신설	폐지
지구단위계획	합 계	12	-	-
	여건변화	12	-	-
지구단위계획구역	합 계	27	27	3
	여건변화	18	4	3
	복합용도개발	-	8	-
	계획미수립	9	15	-

※ 계획 변경 수반 지구단위계획구역 : 10개소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구 분		재정비(안)			
		합계	신설	변경	폐지
총 계		339	52	275	12
교통시설	도로	215	39	168	8
	주차장	6	2	4	-
공간시설	광장	11	-	11	-
	공원	19	1	16	2
	녹지	19	1	18	-
	공공공지	1	-	1	-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15	3	10	2
	전기공급설비	1	-	1	-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22	-	22	-
	체육시설	1	1	-	-
방재시설	하천	24	5	19	-
	유수지	1	-	1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등	4	-	4	-

○ 추진 현황

- 2024. 5. 30. : 1차 주민공람 (~ 2024. 6. 13. 까지)
- 2024. 12. 16. : 2차 주민공람 (~ 2025. 1. 6. 까지)
- 2025. 3. 31. : 3차 주민공람 (~ 2025. 4. 14. 까지)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행정절차 병행 진행

○ 향후 일정

- 2025. 4월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25. 5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5. 6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의견 청취안은 2022년 9월에 수립된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도시의 미래상을 공간에 구체화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91

2025. 4. 15.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4. 4.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5. 4. 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4. 1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의 세출항목 상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대하여 2023. 2. 28. 개정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규정」의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의 폭을 넓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규정 명확화(안 제2조)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안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3호부터 제5호에 세입원 주체 명확화와 근거 법의 약칭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에 근거 법령 인용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692

2025. 4. 15.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4. 4.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5. 4. 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4. 1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

○ 추진 필요성

- 법률에 따른 수탁 대상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업무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호구역 관리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내용

-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 교통사고 및交通安全시설 현황조사, 통행량 및 통학 동선 조사,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도면 작성 등

□ 위탁시설 개요

-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16개소 (통합·중복 제외)

구분	합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개소수[개]	116	106	7	3
총연장[m]	61,205	59,265	1,610	330
평균연장[m/개]	528	559	230	110

□ 민간위탁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탁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
- 수탁방법 :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 관련법률에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 선정 심의 생략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 제외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비용 : 약 310백만원 (도비 50%, 시비 50%)
 - '25. 3. 5. 도비 보조금이 조정되어 최종 확정내시 및 교부 결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회 추경에 확정예산 반영
- 산출근거 : 총연장 61km × 5백만원/1km = 약 310백만원
 - *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배포 원가산출 내역서 기준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건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직접조사 또는 일반 용역계약을 통한 조사가 가능하지만 현장조사, 도면 작성, 개선안 수립,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및 관리 등 업무 범위가 과다하여 담당 공무원의 직접 수행은 어렵고, ○ '24년 최초 시행됨에 따라 제도 정착까지는 관련지침을 수립·관리하는 공공기관을 통해 추진 필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과업 수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비용은 관련지침에 따른 과업범위에 적합하게 수립된 경찰청 표준원가계산에 근거하고, ○ '24년 실태조사를 수행했던 기관으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에 따른 안정적 결과물 도출 및 효율성 증가 기대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경찰청 산하기관으로써 교통 안전분야에 축적된 경험 및 관련 전문인력 활용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종합평가 지표로 등록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신력 있는 성과 측정 가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지도·점검)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고, ○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과업 수행의 투명성 확보 기대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부터 최초 시행되는 조사로 일반용역사나 타 전문 기관의 수행 경험이 부족함에 따라, 관련지침을 수립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결과 도출 도모
총 합 의 건	<p>'24년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된 초기단계로, 일반용역사나 타 기관의 수행 경험이 부족함에 따라, 관련지침을 수립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공신력 있고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p>

□ 향후 계획

- 2025. 4. :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시, 한국도로교통공단)
 - 한국도로교통공단 협약안 협의 및 변호사 자문결과 반영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동의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 4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 중에 하나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전임.
- 위탁시설은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16개소 총 연장 61,205미터(2024년도 118개소/60,925미터)로 위탁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한 310백만원을 산정하였음. 이는 전년에 비해 총연장이 280미터가 증가하였기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공공산하 기관으로 교통안전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하기에 안정적인 사무 수행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5년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93

2025. 4. 15.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4. 4.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5. 4.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4. 1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주차장법 시행령」에 추가된 학생용 기숙사 및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7에 명시함으로써 그 밖의 건축물과 혼동을 방지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7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0호,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10.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
11.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에 포함된 시설물 중 학생용 기숙사와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 센터가 미비되어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들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각각 시설면적 400제곱미터 당 1대로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